

제426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상정된 안건

- | | |
|---|---|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3 |
| 3.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 3 |
| 4.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 3 |
| 5.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 3 |
| 6.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 3 |
| 7.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 3 |
| 8.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 3 |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먼저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5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구자근·이종욱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권영세·윤영석 위원님이 보임되셨으며, 6월 10일 자로 황명선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조승래 위원님이 보임되셨으며, 6월 20일 자로 신동욱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유상범 위원님이 보임되셨으며, 6월

30일 자로 신영대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안규백 위원님이 보임되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전위 선배님들 모시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국가와 경제를 위해서 또 우리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반갑습니다. 대전 유성구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매우 기분 좋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5년간 법사위에만 있다가 드디어 탈출해서 기재위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앞으로도 큰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알려 드립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2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4시05분)

○**위원장 송언석**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청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특별법 도입에 관한 청원 및 청소년 건강 보호 등을 위한 불법 전자담배 퇴출, 탈루 세액 징수 및 담배 동일규제 등을 위한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에 관한 입법 청원, 이상 2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3.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 4.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 5.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 6.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 7.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 8.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14시06분)

○**위원장 송언석**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일 1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수 여건 변화에 따른 세입경정과 함께 소비·투자 촉진을 위한 경기 진작 및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는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국채발행 등 추경의 재원 대책과 함께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채 인수 등의 지출소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12조 2460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7114억 원을 증액하여 총 12조 95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예상 세수 감소분 10조 3446억 원을 감액하고 공자기금 예수금 22조 59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6648억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전입금 46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87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6648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2711억 원을 증액하였고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400억 원, 기후대응기금 전출 17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추가 국고채 발행과 타 회계기금 예탁 규모 조정, 지방채 인수 확대 등을 통해 조달·운용 규모를 314조 4852억 원에서 338조 4104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복권기금은 현행 조달·운용 규모 8조 8685억 원의 변경 없이 기금 내 여유자금의 조정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2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공적개발원조 사업 예산의 조정을 통해 조달·운용 규모를 2조 3527억 원에서 2조 3127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예산의 조정을 통해 조달·운용 규모를 2조 6217억 원에서 2조 6047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공재산취득 사업 예산의 조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 확대를 통해 조달·운용 규모를 3조 4820억 원에서 3조 4824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을 통해 조달·운용 규모를 140조 2894억 원에서 137조 2894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세수입 경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세수입은 범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5개 세목에서 11.3조 원을 감액 경정하고 상속세에 대해서는 0.9조 원을 증액 경정하여 본예산 382.4조 원 대비 총 10.3조 원을 감액한 372.1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세입경정은 지난 5월까지의 국세수입 실적, 향후 세수 여건 등을 반영하여 세입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 대규모 세수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입니다.

국세수입 경정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법인 실적 증가세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세목을 감액 경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 변수를 발표하지 아니하고 세수추계모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요 거시경제 변수 등 추경 편성의 전제가 되는 주요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고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추계모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2025년 2월 개정세법으로 인한 세수 변화 효과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경정한 소득세 및 관세 등의 경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첨부서류 중 추계분석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국고채 균등 발행 계획과 달리 추가 국고채를 조기 발행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이자지급기간이 과다제상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액 편성 당시 금리가 과다 산정된 점, 최근 5년간 매년 불용액 등이 5000 억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 및 군산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조기 준공을 위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시키려 할 경우 안전 관리 등에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관급자재 공급 및 기상 여건에 따른 공정 지연 요소를 감안하여 연내 집행 가능 소요만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외국환평형기금입니다.

국고채 발행 수입과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달러화를 순매도하는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로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운용 규모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외평기금이 원화재원을 많이 보유 할수록 조달비용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금의 원화재원 운용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손을 많이 드셨는데요. 일단 차규근 위원님 손 드셨고, 두 분하고, 안도걸 위원님하고……

진성준 위원님, 자리 옮기셨어요?

○**진성준 위원** 예, 밀려났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그러면 먼저 차규근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차관님, 먼저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감사합니다.

○**차규근 위원** 올해 추경에서 참 오랜만에 보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민생 안정 이런 것 아닙니까?

○**차규근 위원** 추가 국채 발행하고 세입경정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어도 결코 볼 수 없는 단어가 추가 국채 발행이었습니다. 대단한 논리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빚을 안 낸다는 이유였는데 오히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정부에서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차규근 위원** 또 있습니다. 세입경정인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세입이 수십조 원 평크가 나도 세입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맞습니다.

○**차규근 위원** 세입이 줄어드는데 지출을 그대로 두니까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한 예산을 쓰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윤석열 정부는 강제 불용이니 자연 불용이니 말장난하면서 국민 속에 불을 질렀습니다.

차관님, 세금이 부족하면 솔직히 말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하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하는 게 정석 맞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세입 감액안을 추경안에 편성해 가지고 국회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차규근 위원** 그렇지요? 정석에 따른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투명한 재정 운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조국혁신당은 이미 올해 1월에 10조 원 규모의 세입경정과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이 그에 상응하는 걸로 보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보는 정직한 추경안에 정권교체를 실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출구조조정을 5.3조 원 했다고 발표했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차규근 위원** 그런데 세부 내용을 발표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제 오후에 그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혹시 뭘 숨기는 게 있는가 싶어서 지난 추경에서 확정된 예산과 이번 추경을 비교해서 지출이 줄어든 사업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육교부금 감소분이 1조 9982억 정도 됩니다. 세입경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이 5223억 줄었습니다. 현대건설이 철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무공해차 보급 사업과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사업 예산이 또 5302억 원 줄었습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수요가 줄어든 결과인데 다만 이 예산은 조금 두고 봤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 사업만 해도 전체 지출구조조정 5.3조 원 중 3조 원에 해당합니다. 차관님, 이 중에 오해할 만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대체로 이번에 지출구조조정 사업은 집행이 연내에 되기 어려운 사업과 관련된 것을 뽑았기 때문에 그 외에……

○차규근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지출 감액을 이해할 만한 그런 사유들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기재부가 국회를 찾아서 열심히 설명을 하면 다 이해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지난 정부에서는 매년 지출구조조정을 20조 원씩 한다면서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자료제출을 가지고 논란거리를 만들기보다 국회와 국민께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추경의 경우에는 사업 규모도, 가짓수가 크게 많지 않고 해서 정리도 간단한 편인데요. 다만 본예산의 경우에는 워낙 방대한 자금의 증감이 있는 것과 함께 또 감액이 부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의 경우에는 좀 더……

○차규근 위원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한편 이번 지출구조조정 계상이 된 사업 중에 정부와 국회와 함께 되돌아봐야 할 사업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이 지난 1차 추경 때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1157억 원 증액되었다가 이번 2차 추경에서는 무려 440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도 지난 1차 추경 때에는 정부가 5000억 원을 증액한 내용대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정부는 500억 감액을 했습니다. 두 사업 다 예산보다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 그 이유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맞춤형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는 1차 추경 때는 저희가 단가를 올렸습니다. 다만 이번에 감액한 것은 1학기에 신청 실적이 저조해서 그에 따라서 불용을 한 건데……

○차규근 위원 그러니까 집행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올린 내용과 감액한 사연이 다르다는 말씀을 첨

언드립니다.

○차규근 위원 사연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관님, 불과 두 달 전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증액을 했는데 이제 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정부와 국회 모두 되돌아봐야 할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보다 사업의 명분을 보고 예산을 증액하다가는 꼭 필요한 사업에 돌아갈 예산을 낭비하는 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항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다시 한번 첨언드리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 지출구조조정 세부내역 공개와 사업집행 전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재명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예산에 대해 국회와 국민께 설명하고 설득하는 기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언석 다음,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차관님, 예결위가 먼저 심사하고 상임위가 나중에 심사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져서..... 실은 제1차관이 아닌 제2차관이 나오셔야 되는데 예결위에 있느라고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현재 예결위에 출석 중에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뒤가 바뀐 줄속 추경이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나라 경제가 똑바로 가려면 기재부가 앞장서서 확장재정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이재명 당선 축하 추경을 입법부·행정부를 모조리 손에 넣고 있는 집권 여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난 정부에서 강조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원칙은 이제 폐기되었나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저희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그간에 워낙 내수 부진이 심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기도 합니다.

○이인선 위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추경 편성으로 인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결국은 4.1%가 되면서 기준 3.0 기준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식의 돈 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1300조의 국가채무가, GDP 대비 거의 50% 정도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49%지만 연말되면 결국은 50%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아닙니다. 올해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연말이 되면 49%가 될 거라고 예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 추경에 대해서 관리재정수지하고 국가채무 부담이 늘었지만, 일부가 있지만 무디스 신용평가사에서는 성장에 도움이 되고 관리 가능한 부채 규모라고 언급을 한 적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래세대에다가 빚 청구서를 내는 추경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용평가사 페치는 지난 2월에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국회예정처마저 이번 추경 분석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규모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구체적인, 실효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유념해야 되고요.

이번 추경의 주목적이 민생회복…… 어쨌든 소비쿠폰의 효과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불명확한 상태입니다만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소비자 논문이나 여러 가지 논문을 봤을 때 일단 이런 평가가, 우리가 평소에 좀 과대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논문 지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재원 조달 방안이 제대로 없는 정부의 이전지출은 소비진작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고 오히려 물가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재정을 맡고 있는 기재부가 안 될 때는 ‘아니 되옵니다’라고 명확하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장기간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에 이력이 생겨서 오히려 나중에 추세 전환할 때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아무튼 지키고 있는, 그야말로 경제를 지키고 있는 부처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채권도 보면 채권 발행이 미래세대에게는 빚 청구서를 내밀게 되거나 아니면 들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증세를 하게 되면 현세대에 또 부담이 됩니다. 양쪽으로 지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0조를 푸는데 25만 원 정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다시 또 38만 원 내지 40만 원의 빚 부담을 어차피 가지게 되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득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아, 우리가 25만 원, 15만~52만 원 받더라도 이게 나중에 다시 나한테 빚으로 돌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반드시 제시하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있고요.

어쨌든 차관님, 우리가 기재부 공무원을 제일 신뢰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령모개하지 말고 잘 설득해서 반드시 각계각층에다가 진심이 전달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송언석 의사진행 잘되고 있는데……

○정일영 위원 좀 켜 주세요.

○위원장 송언석 1분 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30초면 됩니다.

손 들어도 안 보시고……

자유발언이라고 하지만 질의 순서를 좀 정해 주세요.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고 발언 순서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위원장 송언석 알겠습니다. 제가 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 다시 한번……

김영진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까지 체크했고 진성준 위원님 그다음에 최은석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인선 위원님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앞에 앉아 있는 안도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유상범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한 사람씩 건너뛰어서 앞에까지 하고 그다음에 저 건너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진 위원님하고 정 위원님은 조금 천천히, 차관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려고 영양주사를 맞는 게 아니고 지금 빈혈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려 내기 위한 긴급 수혈 조치다라는 부분, 그 절박감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알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특징 중 하나가 세입 추경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세수 사정이 안 좋아서 10.5조 원의 세입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난 정부가 만들어 낸 세수 기반의 어떤 붕괴 문제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조세부담률이 작년 말로 17.6%로 추계가 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17.6%입니다.

○안도걸 위원 아니지요, 조세부담률이니까 지방세까지 합치면?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17.6%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맞지요? 맞습니다.

지난 문제인 정부, 22년도지요, 그때 22.1%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4.5%p가 급락을 했고 7년 전 수준으로 이게 퇴행합니다. 어렵게 세수 기반을 만들어 놨

는데 공든 탑이 그냥 이삼 년 만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저성장이 지속됐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가 상당히 방치를 한 측면이 있었고. 또 지난 정부가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했습니다. 세수 감세 효과가 한 78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지요. 이것에 따른 후유증이거든요. 그러나 감세를 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전혀 발생을 못 한 상황이고 세수결손만 역대급으로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결손을 총 얼마로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세수결손은 거의 한 87조……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23년, 24년 확정된 게 87.2조지요. 그리고 금년에 세수결손 확정된 게 지금 10.5조 아닙니까? 그러면 97.5조예요. 지금 100조 원에 가까운 세수가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러한 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 세수감 추경을 했는데 저는 금년 세수 전망을 좀 더 비관적으로 봅니다. 정부에서는 한 10조 가까이 봤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보다 한 7조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수가 너무 꺾였어요. 내수가 너무 침체돼서 사업소득세가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도 저는 조금 불안하다고 보고.

또 유류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가 계속 탄력세율을 복원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여기서 빠지는 세금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관세전쟁으로 교역량도 조금 줄고 있는 추세지요. 그러면 관세도 좀 줄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좀 판단이 필요한 상황, 정확히 세수 추계, 세수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나 봤을 때 저는 17조로 보수적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세입경정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가 낸 10.3조는 현재까지 세목상으로 신고 실적이나 예측 가능한 뚜렷한 주요 세목만 들고 온 건 맞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 그건 좀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여하튼 이번에 그걸 현실화한다는 정말 비장한 각오로 세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현재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재량지출 증가율이 1.1%예요, 5년 동안. 그리고 관리재정수지도 지금 3% 이내로 다 잡아 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관리재정수지도 이미 24년도에 3.6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4.1이에요.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서는 2.9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4.2

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달성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나? 전혀 현실성이 없는 재정준칙, GDP 대비 3% 이내로 하겠다라는 그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목표로 두고 숫자를 거꾸로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량지출이 평균 1.1%거든요. 사실상 동결이지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혁신경제를 위한 적극적 투자를 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전면 재수정돼야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현실 진단 그리고 새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재정 투자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안도걸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지금 안도걸 위원님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단순히 세입세출만 계산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기업들이 제대로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경제가 살고 거기서 세수도 더 들어오고 그래야 선순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업을 더 활기차게 돌리고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규제 완화라든지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고민을 하셔 가지고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경제도 살리고 재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AI 등 첨단전략이나 K-콘텐츠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 모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차관님, 재정준칙법안을 2020년에 기재부에서 준비했었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때 왜 이렇게 준비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2019년에 국가채무가 38%, 2020년에 39.8% 그리고 추경까지 해서 44%로 급등을 하면서 급격히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국가신용등급 등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선제적으로 국가재정준칙을 하고 관리재정수지를 3%로 만드는 목표를 제시한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 목표가…… 왜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습니까, 60%와 관리재정수지 3%?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걸 매년 달성하기보다는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이 돼야 되는 측면도 있고……

○**유상범 위원** 아니, 이런 목표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정관리에 있어서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재정관리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걸 어떻게 준수하느냐를, 자기의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재량의 범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어떤 식으로든 결국 국가부채가 급증할 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그래서 저희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는 건 아

닙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한된 국가재정법 안에서도 보면 특별한 경우에 준칙의 예외규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좀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적극적인 재정을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제가 언론에서 보기에는 기재부에서 국가재정준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누락된 것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재정준칙과 관련된 워딩이 없는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유상범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그동안 기재부가 오랜 기간 국가부채의 급등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재정준칙의 마련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갑자기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외관을 보인다는 건 기재부가 새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국가재정 운용의 목표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저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 경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개인적 이익을, 개인적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항상 일정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마련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은 결국은 앞으로 우리 재정이 얼마나 국가부채가 또 증가할지 모르는 위험성에 처해 있다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좀 더 명확하게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다시 한번 열기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설득을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기재부가 나서야 되고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법안도 냈고 또한 재정건전화법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유상범 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추경과 관련돼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3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3조, 13조 중에 소비쿠폰 3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그건 국고보조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 3조가 되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상반기에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추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3조를 부담시키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력이 없으니 국고에서 다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아시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그 요구가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잘 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열악한가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이 3조 부담을 지면 결국 지방자치단체도 엄청난 재정의 악화가 오게 되고 기존의 부채도 못 갚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것 원래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협의 안 하고 일방 발표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미리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한 게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아니, 했습니다.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협의가 없었다고 항의합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보통 이 사업은 과거에도 여러 번 집행된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보조율을 한다는 건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날 회의 때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고보조율은 평소 저희 사업 매칭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 정도 보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상범 위원** 중요한 건 아주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이 부담을 어쨌거나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완화시켜 주려는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인수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1조 원을 추가로 같이 포함시켰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환 위원님 하시고 박성훈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그다음에 박대출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에 간사 이런 식으로 한 분씩 교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1차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감사합니다.

○**김영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5월 국세수입 현황 잠깐 보면 우리가 45.9조 더 잡아 놨었지요, 애초에 본예산 때. 1회 추경까지 세입경정 없다가 이번에 10.4조 세입경정 했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김영환 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한 35조 정도 더 잡아 놓은 거잖아요. 36조 정도, 그렇지요?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21조 정도 더 들어오는데 한 25조 정도 세수를 어떻게 메꿔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점차 하방압력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4조 정도 세입경정 했지만 그래도 지금 추이를 보면 전년보다도 덜 걷혀요. 그만큼 내수나 소비 이쪽, 특히 환율 문제도 좀 있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개별소비세 줄어든 것 이런 것도 전년 대비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내수, 소비 쪽이 좀 위험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입경정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것 세입경정 안 했으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대혼란이 또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완충 작업을 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5조 정도 추가적으로 압력이 있습니다. 거기서 10조 했으니까 한 15조, 16조 정도를 메워야 되는데 통상적인 불용을 봤을 때는 한 7조, 오류칠 조 그 정도 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10조 정도를 여하튼 세입에서 메꾸지 않는 한 지출구조조정 없이는 국채 부담이 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고요.

국가채무 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데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재정 관리가 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본 국가채무비율이 얼마예요? 260%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김영환 위원 미국 얼마입니까? 100% 언저리에서 다 놀고 있어요, 심지어 독일조차도. 유럽도 다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 사실은 재정을 그렇게 쓰지를 않았어요, 해외 선진국처럼. 아셨어요. 저는 그 여파도 계속 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난 3년 동안에 세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장률, 지금 올해 성장률 0.8%지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0.8% 찍은 게 언제인지. 금융위기가 딱 0.8%입니다. 2% 미만으로 성장했던, 대한민국 GDP 역사 중에 네 번이 있습니다. 2% 미만 성장했던 게 석유파동, IMF, 금융위기, 코로나, 네 번 있는데 0.8%가 금융위기 때예요. 지금 0.8%잖아요. 지금 이런 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제 파탄, 민생 파탄을 만들어 놨는데 세수 기반은 무너졌습니다. 지금 재정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펼쳐서 벼랑 끝에 몰린 서민, 중산층 살려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수, 소비 살려 내야 되잖아요.

자, 저번 2/4분기 -0.2, 역성장했어요. 3/4분기 0.1, 4/4분기 0.1, 올해 1/4분기 -0.2입니다. 특히 건설투자 한번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착공 허가 건수, 착공 실적 다 반토막 났

습니다. 건설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특히 내수의 중요한 요인들?

이번 추경에서도 보니까 건설 활성화 관련된 PF 사업장 지원, 이것 조정해야 되는 금융위원회하고 빨리 협의하고, 경제정책 중에 지금 내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 1/4분기 요인들 보면 원계열 전년 기준으로 13%가 빠졌습니다. 사실은 전년도 안 좋았거든요, 건설 경기가. 그러면 건설의 고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것 말씀이 많은데 지방정부하고 협의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장기연체채권 이것 뭐 모럴해저드, 예결위 보니까 제가 너무나 질려 버렸어요. 113만 4000명입니다. 이분들 원금의 5%로 정부가 매입해 주는 거잖아요?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확정은 아닙니다만 대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합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노동 가치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3만 명이 경제활동인구로 포함이 된다면 최저임금만 계산을 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 20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이에요. 113만 명 계산해 보면 27조예요. 자, 4000억 투자해 가지고 27조 하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국민들 살리는 장사 아니에요?

거기다가 복지, 그분들 자꾸 경제 외톨이로 남으면 복지 쪽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고용보험 손실 이런 것들 간접비용까지 생각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 주고, 해외 선진국이 다 하고 있잖아요. 법인들은 해 주는데 왜 개인들은 안 해 줍니까? 이 사람들 얼른 정상적인 경제활동인구로 복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기재부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한말씀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의 경우에 사실상 파산에 처한 상황으로서 더 이상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소각하는 것이라고요. 그로 인하여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재기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차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방금 김영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동일한 조건, 동일한 기관에서 빚을 성실히 상환해 온 국민이 약 361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상환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숫자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성훈 위원** 약 1조 581억 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규칙을 지키면서 성실히 상환을 해 온 이 361만 명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분명히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문제인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빚을 굳이 갚을 필요가 없다, 버티면 정부가 알아서 상환을 해 줄 것이다라는 잘못된 도덕적 해이가 넘쳐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고통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의 간략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같은 프로그램을 담았습니다. 그 경우에는 분할상환을 7년에서 15년 그리고 이자에 대한 감면 지원을 같이 해 가지고요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배려를 하고 아예 갚을 수 없는 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고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채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현재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실 상환자랑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채권 소각을 무작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매입한 다음에 그분들의 재산과 그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1년 정도 지켜보고 정말로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저희가 소각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할 계획입니다.

○**박성훈 위원** 차관님, 문제는 이것을 신청을 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지요, 배드뱅크에서.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본인이 어떤 사유로 빚을 지게 됐는지, 예를 들어 사행성 산업을 통해서 본인이 빚을 지게 된 경우에도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만 되면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이분들의 빚을 갚는 데 들어가는 정부 재원 규모가 약 4000억이 넘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4000억 잡혀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결국 국민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부가 생각할 때 이러한 사회의 기준, 도덕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6월 27일 날 정부가 굉장히 놀라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6·27 대책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동으로 마련을 하셨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6·27 어떤 대책 말씀이십니까?

○**박성훈 위원** 가계부채 관리 방안입니다. 이 관계부처 협동에 기재부가 당연히 참여를 했겠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했습니다.

○**박성훈 위원**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사전 조율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사전 조율을 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대책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책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이 됐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협의 조율됐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대책이야말로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당연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분석을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그 당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늘어 갈 경우에는 전반적인 금융 건전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행된 조치고요.

이 조치는 사실은 금리 상승기에 완화됐던 규제들이 금리 인하기에 다시 돌아와야 될 규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박성훈 위원** 차관님, 제가 지금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결국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고 있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보호장치, 제도적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게 우리 국민과,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역차별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 부동산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을 중에 외국인들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주택 쇼핑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마련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관리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지금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에 대해서 가수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책을 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다만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계약이 완성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조치하도록 해서 실수요자는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성훈 위원** 차관님, 외국인 주택 구매에 대한 내국인과의 차별에 대한 해결 방안 또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발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외에도 2030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주택 실수요자들이 이번 대책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가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수영 차관님, 살펴만 보지 말고 박성훈 위원님의 중요한 질의 하셨으니까 자료를 마련해서 기재위 전체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저는 사실 이번 2차 추경이 1차 추경 때 당초 여러 가지 제안했던 바대로 추경을 입안하고 의결했다면 또다시 2차 추경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반복하고 타이밍이 계속 늦어지면서 이 경제 침체의 시기를 계속 연장하는 부분을 좀 끊어 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추경을 잘 통과시키고 조기 집행을 통해서 본예산 후 내년까지 이어가는 길목에 경제의 활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성장률을 좀 짚어 보면—거시경제적으로—실제로는 23년부터, 저 그림대로 22년 2.1, 23년은 1.4, 24년은 2.1로 전체의 경제성장률 곡선을 보더라도 가장 낮은 국면이 지금 3년 연속 유지되고 있고 올해도 저게 유지되면서 당초에 2.0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2월 달에 1.6 그리고 현재 한국은행과 KDI에서는 0.8까지 올해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외적인 경제 여건, 미중 간의 경제 갈등,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갈등 그다음에 전쟁의 격화, 여러 가지 대외적 여건과 관세 전쟁을 비롯한 부분들이 중첩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타났고 내재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내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저하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25년 1분기의 경제성장률이 결국은 -0.2를 기록했고 세부적인 항목을 보더라도 더 안 좋은 형태로 다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요소별로.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국면을 놔두면 과연 우리 경제의 선순환적 발전, 이를 통한 세입이라든지 여타 부분들이 더 악화돼서 아까 안도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건강한 사람에게 더 좋은 영양제가 아니라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긴급 처방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지표가 나와 있는데 차관님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지금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 속에서 이번 추경에 관해 당선축하금이다, 두루두루 여러 가지 워딩을 쓰지만 실제로 저는 경제정책에서 반드시 지고지선한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이런 국면에서 민생지원금 형태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실제로 경제에 선순환적 구조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통해서 장기적인 세입 구조를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정책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차관은 어떻게 보세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차관이 보시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저희가 종합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같이 감안했을 때 또 재정기능의 적극성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한국은행 총재도 사실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가 추경의 규모를 20조~30조 정도를 진행하면 전체 재정의 건전성 플러스 경제의 침체를, 부분적으로 활력을 이끌어 내면서 이를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올려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2차 추경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는 지수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지난번 1차 추경을 할 때는 0.1%p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이번 추경의 경우에는 향후 1년간 0.2%p의 역할을,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경이 지금 7월 달이다 보니 올해 반년밖에 잡히지 않아서 0.1 정도가 올라야 성장률에 역할을 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저는 1차 추경 때 같이 통합적으로 했으면 한은에서 분석한 바대로 20조~30조 사이의 추경을 통해서 0.2% 성장률을 통해서 지금 아주 절반이하로, 예측 2%에서 0.8%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의 추이를 조정할 수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 더는 건설경기의 부진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가덕도신공항도 그렇고 GTX-C도 그렇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유는 뭐고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가덕도의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다시 또 출발해야 될 사정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와 관련해서는 일부 감액을 했고요. 하지만 혹시라도 좀 더 재개될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해서 일부 토지 매입비나 등등등은 같이 남겨 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SOC 사업도 현재 상황을 지켜봤을 때 올해 안에 집행되기 어려운 부분은 좀 감액 조치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진 위원 감액이 됐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현장을 보면 사실은 현실성에, 현장의 공사비라든지 여타 자재비나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당초 계획의 그 금액으로 진행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현재 SOC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현장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에 따르는 예산들을 편성해서 그 예산에 따르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끔 기재부가 국토부하고 다시금 정확

히 현장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그리고 이번에 또 감액된 것도 있지만 말씀하시는 건설 투자가 위낙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 안에 추가로 더 집행할 걸 다 전수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4조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반영해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반기에 빨리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수영**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1차 추경 때는 국가재정 관리방안 보고서에 들어 있던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번 2차 추경에는 삭제됐지요? 삭제된 것 맞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이번에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 부분은 담지 않았습니다.

○**박대출 위원** 담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재정준칙 포기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박대출 위원** 포기는 아닙니까? 포기가 아니면 뭐지요? 연기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재정준칙 도입을 포기를 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의 장을 열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기재부 입장은 뭐냐고요, 국회 입장을 묻는 게 아니라. 기재부 입장이 기존에는 명확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재부가 기존 입장은. 그렇지요? 그러면 연기입니까? 뭐예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그 부분은, 재정 지속가능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출 쪽도 있고……

○**박대출 위원** 재정 지속가능성을 계속 중시하고 지속가능성을 중점에 두겠다는 걸 물은 게 아니라 재정준칙 도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연기하겠다는 것이냐, 기재부 입장이 뭐냐고 물은 겁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소관하는 업무가 그쪽 분야가 아니라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아니, 재정준칙을…… 지금 차관이 기재부장관을 대신해서 국회에 출석을 해 놓고 재정준칙 도입이라는, 기존의 기재부의 철학 같은 걸로 지켜 온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이냐, 바뀐 것이냐, 아니면 바뀌지 않고 단순히 연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없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저희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속가능성을 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재정준칙 도입을, 계속 도입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냐고 묻는 겁니다.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대답을 못 해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재정준칙 없어도 될 만큼 우리 재정 여력이 충분합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그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데 동의를 하냐고 물었는데 하기 나름이다라는 답변이 무슨 뜻이지요? 재정준칙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원칙을 바꾸겠다는 입장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은 말이지요, 여러 가지 진작 바꿔야 될 것은 그런 원칙이 아니라 민생예산의 개념 같은 걸 바꿔야 돼요. 일회성으로 주는 것이 진정한 민생예산이 아니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예산으로 하는 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실질적 지원이 되는 것인가 이걸 지금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만큼 재정준칙 도입이나 지속가능성의 의미가 개별의 큰 예산 원칙에도 중요하겠지만 개별 예산에서도 그 정신이 담기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언 빨에 오줌 누기를 하는 것보다는 얼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박대출 위원** 이를테면 볍씨를 지원하는 게 나아요, 밥 한 공기, 밥 한 그릇을 지원하는 게 나을까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때에 따라 두 가지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때에 따라 다르지요. 급하면, 당장 배가 고프면 밥 한 그릇 지원하는 게 나을 거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밥 한 그릇과 함께 볍씨 한 통을 주면 그걸 키워 가지고 밥을 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민생예산의 개념도 그런 식으로 지금 바꿔야 돼요. 추경예산에서 늘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저희가 추경 때 말이지요, 경남 산불 피해 지원에 대해서 내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1차 추경 때 답변은 했는데 결국은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뭘 냈느냐하면 경남 산불 피해가 이번 봄철 산불 피해 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었는데 피해 지역의 민생 지원을 위해서 천연물 생산 농가에 대한 연계 산업화 거점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단순히 예산 몇 푼 지원하는 것보다도 자립할 수 있고 앞으로 지속가능성이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예산을 뒷받침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그런 부분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천연물산업 거점 건립사업에 공모하는 예비 1순위 사업으로 경남이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을 궁정적으로 검토해서 설계용역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궁정 검토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예, 살펴봐 주시지요. 살펴보시지만 말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박수영 박대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정일영 위원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차관님 축하드리고요.

이게 원래 1차관님 소관은 아닌데, 지금 예산실 간부들도 다 예결위 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나와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총괄심의관 나와 있습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지요. 그렇지요? 너무 어렵고 민생경제는 파탄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좀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이번 주에 의결이 된다고 그러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현재 TF를 행안부 중심으로 꾸려 가지고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날짜를 딱 확정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정일영 위원 대통령께서도 신속하게 하라고 그러시고 국회에서도 당연히 의결된다고 보고 정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저희가 볼 때는.....

○정일영 위원 국민들은 되게 갑갑하게 생각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라고 그랬어요? 이달 말, 오늘 7월 1일이니까 7월 내에는 할 겁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만약에 이번 주에 통과되면 7월 안에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7월 안에.

하여튼 국민들은 요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어렵고 민생경제가 거의 파탄 상태니까 지역경제, 민생경제, 내수경제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빨리빨리 하셔서 집행되도록 하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내수경제, 제가 작년 국감 때 또 예산심의할 때도 최상목 전 부총리한테도 많이 얘기하면 부총리는 ‘추경이 필요 없다. 금년 본예산 조기집행 빨리해 가지고 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경예산도 신속히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본예산 집행률도 최상목 부총리가 얘기한 것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기재부에서 좀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평상시보다 빠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별로 안 빠르잖아요, 지금.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저희는 최대한으로 빠르게 하려고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지금 몇 퍼센트예요? 제가 볼 때는 빠르지 않던데? 1/4분기에 41.7% 똑

같아요. 하나도 빠르지가 않아요. 경제 살리려면 예산집행을 좀 빨리빨리 해야지요, 기재부에서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5월 말 기준으로 57.6% 집행을 해 가지고요.

○**정일영 위원** 5월 말? 그러면 예년보다 좀 빠른가요? 좀 늘었어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저희가 작년에는 55.6%니까요 그것보다 조금 더 올린 걸로……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추경도 중요하지만 경제 살리는 데는 예산집행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예산집행 좀 확실하게, 최상목 부총리는 말로만 하고 안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 되고.

세수결손이 2023년도에 56조 4000억 원, 24년도에 29조 6000억 원, 86조 세수결손 났잖아요. 그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죄 부총리 있을 때 완전히 땀빵식으로 그냥 해 버렸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원칙적으로 정공법으로 세입경정 10조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 짤 때 세입 추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나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조 세입경정 해 가지고 더 이상 문제가 없겠습니까? 괜찮아요, 차관님 보실 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저희도 연말까지 다 완벽하게 전망한 건 아니고 현재 있는 실적하고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방·하방 요인이 다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좋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고채 추가 발행이 한 22조 7000억 원 되지요? 그렇지요? 국가채무비율이 한 49%, 문제없잖아요, 49%?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GDP 대비 49%로 돼 있고요. 이번에 무디스에서……

○**정일영 위원** 문제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1차관님.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무디스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관리 가능하잖아요. 문제없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나라, 선진국 비교해서도 괜찮고. 그걸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추경 편성하면 쉬운 말로 돈이 풀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물가나 부동산 이런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영향이 없어요.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아니요, 지금 같은 내수 부진 상태에서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달 물가 숫자는 들락날락할 수 있지만 이걸로 인한 효과는 그렇게,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전에 2022년도 등등 보면 추경 집행한 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잠

시 오르다가 원위치했어요. 다 분석하셨잖아요. 그것도 기재부에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GDP는 한 0.32% 성장하는 것 그런 것도 설명하시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관세청이 없는데 마약이 지금 전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 예산이 금년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시든지 추경에 좀 넣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국격을 높이고, 내란·비상계엄 때문에 국격이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운데 APEC 회의가 있어요.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APEC에 필요한 예산들이 첨단미디어 융복합 인프라, 도시 경관, 지역의료센터 이런 것 해 가지고 한 102억 정도 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텐데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격을 높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입니다. 기재부에서 바짝 신경 써서 추경에 일부라도 들어가서 APEC 행사를 제대로 마칠 수 있게 기재부가 앞장서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차관님, 최근 정부 추경에서 발표한 장기연체 채무 탕감 방안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말씀 주시면……

○최은석 위원 이게 지금 도덕적 해이나 아니면 모럴 해저드 같은 것들을 조장한다는 그런 비판도 많고 또 공정성과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채무 탕감으로 열심히 일해서 채무를 갚은 성실한 국민만 바보가 됐다 이런 비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그래서 지금 채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장기간의 연체로 인해서 사실상 채무 추심의 부담을, 계속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상 상환할 수 없는 파산에 준하는 상태에 해당되는 분들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최은석 위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는 기준을 보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많이 덜 된 것 같아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A와 B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한 금융기관에서만 대출받은 분하고 그다음에 금융사를 나누어서 이렇게 대출받은 사람, 이런 경우에도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탕감이 안

되고 B만 탕감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5000만 원 소액 기준……

○**최은석 위원** 그래서 A는 지금 탕감액이 없고 여전히 부채가 남아 있게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탕감하고 잔여 부채가 2000만 원 남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면 금융기관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개인별로 차이 나는 것도 좀 그렇고.

지금 아마 건당 기준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행정 편의상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 실제로 동일한 채무를 부담한 사람인 A와 B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위에서 일부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도박이나 사행성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채무 탕감 대상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채무 탕감 이런 것들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구체적인 기준은 지금 금융위에서 예산이, 그와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할 결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정부가 재기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정책 취지 이런 것들을 좀 미화하고 있는데 국민 다수는 여전히 정책의 정당성하고 사회적 신뢰훼손의 측면에 있어서 아주 많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도 악화되고 또 시장질서도 훼손되고 또 그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의 어떤 실망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까 물론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장기연체 채무 탕감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재검토라기보다는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금융위랑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 실행 방안에서 이렇게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사람이, 다수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람이 이런 데만 혜택을 보거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잘 보셔서 그렇게 좀 정당하고 신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관계 부처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에도 추경 때문에 국채 발행 많이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19조 8000……

○**최은석 위원** 그래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서는 다들 심각성을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국가채무와 관련돼서 정부가 부담해야 될 이자비용 또 전체 비중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발행량 증가에 따른 이자를 이번에 같이 담아 왔습니다.

○**최은석 위원** 우리가 지금 만기 2년 미만의 단기 국고채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완전히 없는지는…… 보통 3년, 5년, 10년, 30년 이렇

게.....

○최은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앞으로 국채 발행 수요나 또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그런 가능성이 높고 또 효율적인 재정 자금 조달의 중요성도 커지고 또 정부가 부담해야 될 이자비용 이런 것들도 앞으로 줄여 나가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단기 국고채 많이 발행하고 또 실제로 최근에 이자를 보면.....

그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1년채 이자가 보면 장기보다 훨씬 좀 낮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단기 2년 미만의 국채 발행에 대해서 앞으로 기재부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재정 조달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도 좀 누리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개시장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외환보유고 관리, 국고채를 활용한 RP 시장 같은 이런 것들도 활성화시키는 것 이런 데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위원님 말씀 방금 그거 확인을 해 보니까 2년물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은석 위원 2년 미만에 대해서도. 1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초단기 같은 경우에는 통안채하고 같이 시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고민을 좀 한 사항도 있고요.

○최은석 위원 통안채가 있기는 한데 국고채에서도 그렇게 초단기 국고채 발행을 통해서 탄력적인 재정운용이나 이자비용 절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채도 국채시장의 활성화나 여러 가지 수요,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해서 투자처도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기간물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은석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진성준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새 정부 출범한 지 2주 만에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제출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추경 편성에 뜻이 있는 만큼 어려운 재정 협판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우리 경제 또 민생이 회복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맞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역경제…… 지방경제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GRDP도 조금 살펴보고 왔는데 서울 또 대도시권보다 지방들이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맞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 만큼 지방재정도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좀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안에도 인구소멸위기지역의 경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만 원 정도 추가 지원하자. 좋은 생각인데 전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인구소멸지역은 더 좀 지원을 하되 서울 외의 다른 지방들에 대해서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지방일수록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중이 높더라고요. 서울, 경기 이런 데는 한 17% 내외인데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많게는 32%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돈이 안 돌면 그 지역경제가 훨씬 더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 서울보다도, 수도권보다도 어쩌면 지방의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조치가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 그렇다면 지방에 조금 더 지원해서 소비 여력을 늘려 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도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게 아니고 국고보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지방정부가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 매칭비 부담이 상당해요. 실제로 인구소멸지역의 몇 지방자치단체는 매칭 비용이 없어서 지역쿠폰 발행을 포기해 버렸어요. 또 산불이 났던 의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불피해 복구 지원 예산이 국고로 지원되는데 여기에 매칭으로 들어가야 될 지방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가지고 반납했다 그래요. 그런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한다 그러면서 지방비도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된다? 감당 못하는 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매칭 비율을 더 좀 섬세하게 다듬든지 아니면 정부가 생각하는…… 서울 30%, 기타 지방 2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확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이 추경, 기왕에 빚을 내서 추경을 하는 효과가 제대로 살아난다, 이거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취지에는 저희들 동감합니다만 매우 어려운 주문이기도 한데요, 같이 검토하고 또 소위 때……

○**진성준 위원** 함께 지혜를 모아 봅시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세입경정도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수가 확실하게 부족한 것이 예측되면 정공법으로 해야지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방교부세는 교부를 하는데 지방교육교부금은 교부하지 않잖

아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정산……

○진성준 위원 예,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교육교부금은 이번에 정산하는 거고……

○진성준 위원 이번에 정산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지자체는 다음에 하는……

○진성준 위원 예, 다음에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3년째 세수결손이 계속 발생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어렵지만 지방교육청도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저는 그럴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방교육청은 좀 낫다라고 판단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지방교육청의 교육재정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침 우리 본예산의 목적예비비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도록 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예산 또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예산, 이것 집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꽁꽁 묶어 놓고 안 쓰면 뭐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적극 검토해서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아까 말씀한 두 가지랑 이 건까지 다 포함해서 예결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좀 물어봅시다.

이번에 장기 소액 연체자 채권 소각하는데 도박 빚도 탕감해 줍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기준을 지금 만들어서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성준 위원 그럴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3개월만 연체를 해도 채권 추심이 득달같습니다. 7년 내내 채무 독촉을 받은 채무자가 오죽하면 이런 상황에까지 몰렸겠습니까? 갚으려야 갚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들을 이대로 둬 버리면 국가가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복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걸 탕감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의 복지 비용을 오히려 절약할 수 있어요. 생산적인 곳으로 돌려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도덕적 해이 운운하면서……

역대에도 갚을 수 없는 채무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단호하게 해 보자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이번에 1년간 재산조사까지 다 해 가지고 정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수영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서울이 지역구이신 위원님께서 지역의 어려운 재정 사정 말씀해 주셔서 비수도권 의원으로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추경안 이번에 나오는 것 중에서 아까 장기 채무자 탕감 문제 다시 한번 저도 문제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전부터 채무 조정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 회고해 보면 코로나 시절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 헌법상 보상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영업 규제를 받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희생을 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것 아닌가 했는데 정부에서 완강한 반대로, 실제 국회와 좀 다른 시각이어서 그때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채무가, 코로나 부채가 되게 많았었고 코로나 자영업자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속 숙원사업이었고 연기, 연기 또 약간 감면, 이자액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버텨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는 오히려 국가가 그런 것을 대출해 줬다가 실질적으로는 탕감해 주고 국가의 부채로 전환시켰던 것.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 시기에 대한민국은 가계부채가 늘어났고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가 늘어났던 그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부채, 자영업자 부채를 단순히 개인의 자기 책임에 따른 부채만으로 그렇게 성격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지적이 하나 있고요.

(박수영 간사, 정태호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자체가,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오히려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가 더 문제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금리 변동이나 리스크를…… 다른 나라는 고정금리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5% 인상했는데 그 5% 인상의 효과들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거의 전가가 안 됩니다, 고정금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부동산 비소구 대출이기 때문에 아파트값 변동에 대한 리스크도 소비자에게 전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비소구 대출도 아니고 그래서 아파트값 오르면 오른 대로 다 원리금 상환받고 내리면 내린 대로 나머지 잔금까지도 다 청구를 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변동금리가 주된 것이었기 때문에 3%밖에 인상을 안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100만 원 낸 사람은 200만 원 내고 200만 원 낸 사람은 300만 원 내고 온 국민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다 갚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뭐니까? 그게 바로 은행들이 지난 3년 동안 연 50조, 60조씩 예대마진만 그 정도 갖습니다. 무슨 금융에 혁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하나도 안 지고 온 국민, 가계대출, 소비자들한테 전가시켰던 그런 행태 속에서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하면 규탄하고 좀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거기에 금융 당국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비판을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계부채 탕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역사적 맥락이나 정책적 실패나 비판에 대한 지점들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대안으로 새출발기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출발기금이 효과

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 조정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도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나 금융위나 좀 적극적으로 보셔야 된다, 실제 피눈물 나는 상황을 남의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럴지 몰라도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금융 당국의 정책적 실패나 비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7년, 5000만 원 이야기하는데 실제 미국 같으면 3년 정도 연구를 해 보니까 파산 상태가 너무 오래되면 정상적으로 회복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사회가 결단을 한번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사회복귀가 되고 그분들이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나 탕감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가계부채가 과다하기 때문에 내수가 꺾인다, 그래서 GDP 대비해서 80%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GDP 대비 90% 넘는 것, 우리가 한 십몇 년 동안 그렇게 해 왔던 것 반성하고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가계부채 정리해야 되고 일관된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단기적으로는 정리를 못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은 좀 정돈을 하자, 그게 저는 탕감이라고 보고.

탕감의 범위나 기준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 개진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방향 자체는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고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조를 좀 정리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들은 좀 끌어안읍시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복귀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자기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번에는 한번 결단합시다’라고 호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확실하게 기조를 갖고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PF 관련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오늘 발표한 부동산 PF에 대해서 마치 그동안에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언급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에 적시 대응을 못 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누적돼서 지금 건설경기가 꺾이고 있다, 그런 다양한 정책적인 파행들이 같이 축적되고 있다,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부동산 PF는 말씀하신 대로 부실사업장을 빨리 정리해야 새로운 사업장이 생기면서 새로운 건설투자가 되고 주택이 공급되고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실사업장은 빨리 재구조화나 정리가 필요하고 이번 추

경에 든 것처럼 정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해서 빨리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같이 병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제가 마지막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차관님 우선 영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재정준칙을 포기한 거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답변을 계속 못 하시더라고요. 기재부가 그동안 재정준칙에 대해서 만들겠다는 확실한 입장이 있었는데 차관님이 가지고 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보니까 기재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반대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그런 것은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저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정준칙, OECD 38개 나라 중에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36개 나라나 됩니다. 그중에 30개 나라는 법제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추진했던 방향처럼 법제화를 이루한 나라고요. 법제화는 안 됐지만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6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튀르키예와 더불어서 재정준칙을 시행하지도 않고 법제화도 하지 않은 이런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36개 OECD 국가들은 재정준칙을 하는데 기재부는 왜 지금 안 하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 나라들은 왜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한다,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희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재정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재정총량 관리방안에 그 단어는 없지만 다른 내용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박대출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재정준칙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런데 차관님이 지속적으로 답을 피하셨다고요.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다 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놔두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도 마이너스 3%라고 하는 또는 3.5%라고 하는 기준을 두어야 거기서 멀어지더라도 크게 멀어지지 않는다는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만 무조건 안 하겠다고 자꾸 도망다닐 일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국가채무에 관련돼서 기재부는 일관되게 D1,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합계 이걸로 지금 계속 자료를 내고 답변도 하고 계시지요?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정부 때까지는 600조 정도밖에 안 됐던 국가채무가 2019~2022년 사이 보시지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GDP 대비 49%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맞습니다.

○**박수영 위원** 50% 넘어가는 것 금방인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계속 D1만 가지고 논의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일반 정부 D2 이게 세계 비교할 때 IMF도 쓰고 있고 유엔도 쓰고 있고 월드뱅크 등등 쓰고 있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D1으로 도망을 가고 있다……

D2 기준으로 보시면 이 검은색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이고요.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른 비기축통화국에 비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채무 비교할 때는 D2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언론이나 정치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선진국은 100%를 넘는다, 일본은 200%를 넘는다 이게 아니라 비기축통화국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모르고 자꾸 D1으로 얘기하고 기축통화국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컨센서스, 그동안 기재부가 취해 오던 입장에 반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D3, D4도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D4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D1, D2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D3, D4가 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D3 한번 보시면 D2 플러스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거든요. 선진국 OECD 국가 중에 공기업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따라서 부채도 제일 많고. 따라서 리스크도 제일 큰데 이 부분을 빼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좀 안 된다, 그동안에 국가부채 규모를 자꾸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재부가 해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D4, 기재부는 이것은 적용 안 한다라고 버리고 있지만 사실은 보시면 군인과 공무원에 대한 연금충당부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또 왜 들어 있느냐?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게 이게 적자가 되고 뺑구가 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보태 주겠다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금법,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전부 다 이번에 넣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D4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속 D1만 가지고 기재부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D2 위주로 국제 비교가 가능하게 해야 되고.

D3, D4에 대해서 보시면 24년 것은 아직 발표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늦게 발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국가채무를 D1만이 아니라 D4까지 광범위하게 관리를 해야만 우리 국가재정의,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지속 가능성 이것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여러 가지 지표를 다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가지고 질의할 시간, 기회를 가지고 싶은데……

○**김영진 위원** 안 돼요, 안 됩니다. 거기서 무슨 질의를 합니까.

○ 진성준 위원 하십시오.

○ 위원장대리 정태호 제가 간단히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재정법상에도 제16조(예산의 원칙) 제1호로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예.

○ 위원장대리 정태호 그런데 이 재정건전성을 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재정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기조절과 소득분배와 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세 가지의 일반론적인 재정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점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외쳤지만 재정이 그러면 제 역할을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늘 문제 제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난 3년 동안을 보니까 2023년도의 국세수입이 2022년도에 비해서 -51.8조, 52조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보면 22조 4000억, 2023년에 비해서 22조나 줄어들었어요. 경제정책을 어떻게 했길래 세상에 국세수입이 매년 줄어드느냐고요. 이렇게 줄어드니까 재정이 제 역할을 못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무슨 재정건전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추경 얘기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정말 줄기차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 죽어 가고 있는데 이때 재정을 풀지 않으면 소상공인들 다 죽는다, 그 얘기를 저희들은 정말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잖아요. 호소하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결국은 자영업자들 약 100만 명이 폐업을 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그런 정책이 전도되는 상황이 저는 발생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당연히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제1호의 가치로 여겨야 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재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AI 시대를 여는 정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것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신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 경제성장의 전략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저는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IT 선도국가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듯이 지금은 AI 선도국가가 돼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정부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과거 IT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정부가 전자정부라는 것을,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우리가 세계 1등이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정부가 IT 시대를 여는 어떻게 보면 마중물 또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면 지금 AI 시대에 있어서 정부가 AI의 선도적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보니까 지금 정부 각 부처가 AI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그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심에,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기획재정부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AI 어젠다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형일 차관께서 원래 경제정책에 늘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오셨는데 이번에 차관 되신 것을 다시 축하드리면서 기재부가 AI 시대를 여는 데 그 중심적인 어젠다를 끌고 가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하실 말씀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아닙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재정의 역할 강화하는 거랑 AI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서 우리나라가 강국으로 도입할지에 대해서 기재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최기상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등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일 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권영세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대출 박성훈 박수영 박홍근 송언석 안도걸
오기형 유상범 윤영석 윤호중 이인선 임광현 정성호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진성준 차규근 최기상 최은석

○**출장 위원(1인)**

천하람

○**청가 위원(1인)**

안규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장관직무대행 이형일

차관보 윤인대

재정관리관 안상열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세제실장 박금철

경제정책국장 김재훈

미래전략국장 유수영

국고국장 황순관

재정정책국장 장문선

공공정책국장 장정진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대외경제국장 민경설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이용욱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구자근	권영세	국민의힘	2025. 5. 2.
이종욱	윤영석		
황명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2025. 6. 10.
신동욱	유상범	국민의힘	2025. 6. 20.
신영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2025. 6. 30.

○의안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9.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9. 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9. 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9. 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8)

이상 4건 4월 3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5월 1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5월 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9)

이상 4건 5월 7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7.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6)

이상 2건 5월 8일 회부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7.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이상 4건 5월 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이상 5건 5월 1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이상 4건 5월 1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3.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3.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4)

이상 3건 5월 14일 회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5.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8)

5월 16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6.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5월 1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9.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6)

이상 3건 5월 20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0.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0.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이상 2건 5월 21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2.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2.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4)

이상 2건 5월 23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6.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1)

5월 27일 회부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4)

이상 2건 5월 29일 회부됨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6)

이상 2건 6월 2일 회부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이상 3건 6월 4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4.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4.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9)

이상 2건 6월 5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5.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5.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이상 2건 6월 9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9.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7)

6월 1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0.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0.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0.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이상 3건 6월 11일 회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이상 3건 6월 12일 회부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3)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2025. 6. 12.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이상 5건 6월 13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4)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5. 6. 13.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8)

이상 6건 6월 16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4)

6월 17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이상 2건 6월 18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8.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8.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8.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8.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1)

이상 4건 6월 19일 회부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9.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2)

6월 2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0.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7)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8)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9)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0)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1)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2)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3)

이상 8건 6월 2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3.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3.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이상 3건 6월 24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4.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4.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4.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2)

이상 3건 6월 25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5.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5.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5.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5.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이상 4건 6월 26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6.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6.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6. 정연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이상 3건 6월 27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7.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7.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이상 3건 6월 30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제35486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487호	일부개정	통계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488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490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552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553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612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613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부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61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126호	제정	기획재정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128호	일부개정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제1130호	일부개정	통계청